

사회경제적 발전, 양성평등 그리고 출산율의 결정요인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이제상^{*}, 송유미²

¹경북대학교 경제학과, ²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cioeconomic development, gender equity and birthrate's determinant: focused on the family axis' transformation model

Je-Sang Lee^{*}, Yoo-Mee Song²

¹Department of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ork, Daegu Cyber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이란 분석틀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父子)의 수직축에서 부부(夫婦)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 단계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 단계로 나뉜다.

본 논문은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가입국 33개국을 후기산업화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머지 103개국을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 출산율에 대해 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성격차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화단계 국가들과 후기산업화 단계 국가 별로 출산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산업화 단계의 개도국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격차지수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에서는 성격차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on birthrate recovery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individualism diffusion, the central axis of the family has transformed from the vertical axis of the father-son relation, to the horizontal axis of the husband-wife relation. This process is divided into 2 stages.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a nation or a society achieves equality of the individual in family formation, including marriage or divorce.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it accomplishes the couple equality in family maintenance, including child rearing and household labor. This paper grouped 33 OECD member countries as post-industrialization countries and 103 countries as industrialization countries. This study utilizes 6 variables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ear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search results find tha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as the education level of women is higher.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as gender equality level is higher.

Keywords : Birth rate, family central axis, gender equity level,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education level of the women

*Corresponding Author : Je-Sang Le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el: +82-10-9176-6813 email: lessibetter@dgmif.re.kr

Received October 4, 2016

Revised November 9,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1. 서론

21세기 들어 유럽과 미국 등 구미 선진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의 출산율이 상승해 대체수준에 근접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중반이후 모든 선진국들이 동거와 이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의 감소를 경험했고, 출산율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 선진국들의 상당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 OECD 선진국들 가운데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은 2000년대 합계출산율이 1.8이상으로 회복된 반면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은 1.5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3].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은 1960년부터 진행된 출산율 하락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Rindfuss와 Brewster[4], Ahn과 Mira[5], Billari와 Kohler[6]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최근 역전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Chesnais[7], Castle[8] 등은 출산율 회복이 양성평등정책 또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과 밀접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출산율의 회복 현상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9][10][16]. 대부분 성 평등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으며, Esping- 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Multiple Equilibrium Model)과 McDonald의 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뤄지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추후 출산율이 반등하는 단계가 있음을 규명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란 경제가 발전하면 가족의 중심축이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이든 농경사회이든 가족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수평축,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수직축,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 농경사회가 수직축 중심 사회였다면 산업화를 거쳐 후기산업사회가 되면 수평축 중심 사회로 변모한다는 의미다.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산업화

단계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투표권 재산권 건강권 등을 행사하고 결혼과 이혼 등 가족 형성 측면에서도 남녀 간의 개인적 평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일반적이다.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생계유지 등 가족의 유지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향해 나아간다.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출산율의 하락과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수준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밝히며, 두 단계에서 출산의 결정요인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다. II장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과 선진국들의 연구동향들을 검토하고, III장에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세운 다음, IV장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서 단계별 출산율의 결정요인들을 찾아내고 두 단계가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V장 연구결과와 함의를 요약하고, 다중균형모형, 성평등이론과 비교한다.

2. 선행연구

2.1 사회경제적 발전과 양성평등

2.1.1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 발전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며, 절대빈곤의 감소, 고용증대, 소득분배의 개선 등 형평이 증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자립경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11].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경제발전론에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W. W. Rostow의 경제발전단계설과 W. A. Lewis의 2부문 모형(Two sector model)이며, 다른 하나는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이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대표적으로 C. G. Clark의 산업구조이행론을 들 수 있다[11].

19세기 이후 세계 각국의 산업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한 Clark는 산업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

분하여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중심이 이행된다고 주장하였다[12]. 그의 이론은 주로 노동력의 산업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도출된 것이며, 산업별 노동력의 이동은 그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산업의 성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 S. Kuznets가 경제발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한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3개의 산업구조’라는 큰 틀을 더욱 발전시켰다. Kuznets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국내 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별 생산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이행한다는 Clark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또 그는 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전환뿐만 아니라 제도, 신념의 변화도 반드시 이뤄져야만 비로소 현대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11].

2.1.2 산업구조의 변화와 양성평등

산업구조이행론은 경제적 측면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적용되어 왔다. 사회학 미래학 정치학에서도 농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 구분하는 프레임은 통해 사회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D. Bell[13]은 전기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이라고 명명하며 사회변동의 비교도식을 도출했다. 그는 이론적 지식의 중심성, 새로운 지적기술의 창출, 지식계급의 확산,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변화, 노동성격의 변화, 정치적 단위로서의 위치, 여성의 역할, 능력주의 등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차원들을 다루었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Bell은 “산업부문에서의 노동은 대부분 남성의 일이었고, 여성은 대체로 배제되었다. 후기산업부문(예컨대 인간서비스)에서의 노동은 여성들에게 확대된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제 여성이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안전한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Bell[13]은 후기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1950년대 노동인구를 특징짓던 전형적인 모습은 노동자의 70%가 가정에 아내와 두 명의 자녀를 둔 남편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그러한 남성은 노동인구의 단 15%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내의 50%이상이 집밖에서 일을 한다”며 “여성지위의 엄청난 변화는 지난 25년 사이에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현저한 특징적 변화중 하나이자, 25년 전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고 서술했다.

정치학자 D. Inglehart도 Bell의 전기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라는 사회변동의 비교도식을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이 중요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효과는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단계 두 단계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14].

Inglehart와 Norris[15]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양성평등과 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인구, 인적 자원, 노동력, 사회적 지위, 생활조건, 과학과 종교, 매스 미디어, 정부, 사회보험, 가족구조, 성역할, 문화적 가치 등 12개 부문에 걸쳐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단계로 분류했다. 12개 부문 중 7개를 골라 [Table. 1]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이 사회의 유급노동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다. 또 여성들은 문자해독능력과 교육의 기회를 얻고, 선거권을 획득하며, 의회에도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남성에 비해 힘이 미미하다.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이 전문직, 관리직 등에 높은 지위를 얻어감에 따라 보다 성평등 쪽으로 이동하고,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간다. 선진국에서는 현재 이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양성평등은 후기산업화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Table 1. Typology of stages of societal modernization[15]

	From Agrarian to Industrial Societies.	From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Societies
Population	The shift from agrarian villages to metropolitan conurbations.	The diffusion from urban areas to suburban neighborhoods. Greater social geographic mobility, including immigration across national borders, generating the rise of more multicultural societies.
Human capital	Growing levels of education, literacy, and numeracy and the spread of basic schooling.	Rising levels of education, especially at secondary and university levels, generating increased levels of human capital and cognitive skills.

Workforce	The shift from extraction and agriculture towar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The rise of the professional and managerial occupation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greater occupational specialization.
Social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the early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and elements of social protection for illness, unemployment, and old age.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 contraction of the state, displacing social protection increasingly to the nonprofit and private sectors.
Family structure	The shift from extended to nuclear families, the gradual reduction in the fertility rate.	The erosion of the nuclear family, the growth of nontraditional households, and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 and divorce.
Sex roles	The entry of more women into the paid workforce.	Growing equality of sex roles in the division of labor within the home, family and workforce, and the rise of women(especially married women) in the paid labor force.
Cultural values	Material security, traditional authority, and communal obligations.	Quality of life issues, self-expression, individualism, and postmaterialism.

2.2 21세기 출산율 회복 관련 연구동향

2.2.1 선진국 출산율의 반등

20세기 후반기에 선진국들은 출산율의 하락, 결혼의 감소, 이혼의 증가, 동거와 혼외출산의 증가 등 ‘가족 약화(less family)’ 시나리오를 경험한다[16]. Gary Becker의 신가족경제학과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란 두 이론이 이 시나리오의 장기 추세를 예측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이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세기 후반기 선진국에 나타난 가족 트렌드들은 이 두 이론의 예측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3].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가족 약화 시나리오가 멈추거나 역전되는 사회현상이 여러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16].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이상이었던 영국 미국의 경우 1970년대 1.7이하로 떨어졌다가, 안정적인 2.0으로 회복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경우 1960년대 출산율이 대략 2.5-2.7이었다가 1980년대 중반 1.5로 거의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중국에는 1.8-2.0로 회복했다. 반면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출산율이 하락하여 1990년대 1.3 아래의 초저출산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후 1.4-1.5까지 일부 반등했지만, 명백한 회복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3].

2.2.2 출산율 반등에 대한 연구동향

21세기 들어 상당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반등하자, 이론적 논의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먼저 20세기 후반 여성의 교육신장과 노동력 참가가 이뤄진 선진국들의 경우 여성의 노동력 참가 등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역전되었다는 성과물들이 나왔다. Rindfuss와 Brewster[4], Ahn과 Mira[5]는 1970년대에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

참가율간의 상관관계가 부정적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Billari와 Kohler[6]는 197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 초혼율 혼외출산율 등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밝혔다. Myrskylä, Kohler과 Billari[17][18]은 20세기 후반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상관관계가, 21세기 들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다른 한편으로 출산율 회복의 원인이 양성평등 또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밀접하다는 연구 성과물들이 나왔다. Chesnais[7]는 스웨덴과 이탈리아를 비교하며 출산이 양성평등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Castle[8]은 OECD 21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이 가족 중심의 문화전통이 분명하고 여성의 노동참여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그 관계가 역전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일과 가정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Torr와 Short[19]는 미국의 맞벌이 커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과 성 평등의 관계가 U자형 관계라면서 부부간 가사 분업이 잘 이뤄지면, 둘째 자녀의 출산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2.2.3 성평등주의적 분석틀(framework)

2.2.3.1 Esping-Andersen의 다중균형모형

최근 들어서는 21세기 출산율의 회복 현상을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성 평등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Esping-Andersen와 Billari[3]의 다중균형모형이다. 다중균형모형은 20세기 후반의 출산율 하락의 단계와 21세기 출산율의 회복을

동시에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이다. [Fig. 1]은 성 평등주의와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성 평등주의와 출산율은 U자형 관계를 가진다. 성별분업적인 초기 균형 A에서 성 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임계점 B를 지나 성 평등주의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여 C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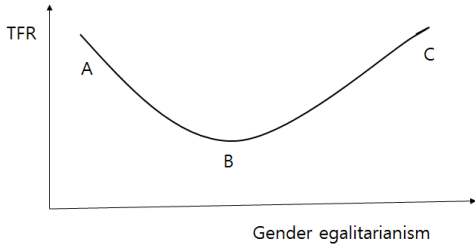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TFR and Gender Equity[3]

점 A는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주부 결합이 주도하는 레짐을 나타내며, 높은 출산율과 결혼의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점 B는 성 평등주의가 아직 확산되지 않아 낮은 출산율과 결혼의 불안정성이 표출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점 C는 성 평등주의가 지배적인 규범 지위를 획득하여, 높은 출산율과 결혼의 안정성을 회복한다고 가정한다.

다중균형모형은 거시 수준의 ‘속도’ 개념을 사용하여 성 평등주의의 확산을 설명하며, 확산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적 신뢰의 강도와 사회계층화가 확산에 영향을 주는 정도이다. 사람들 간에 행동과 기대치 등 규범이 동질적일수록 확산이 빠르고, 이질적일수록 확산이 더디다. 또 종교적 인종적 분리가 존재하고, 교육적 장애물이 많을수록 확산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다중균형모형은 성평등주의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모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평등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인이나 커플에게 적용되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성평등’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성평등수준이 높아진다면, 커플들이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일관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 그런데 [Fig. 1.]에서 성평등수준이 점 A에서 점 B로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점 B에서 점 C로 높아지면 출산율이 높

아진다. 그래서 점 A에서 점 B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성평등’과 점 B에서 점 C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성평등’은 서로 다른 개념의 성 평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중간수준인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출산 결정이나 사회제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분명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2.2.3.2 McDonald의 성평등이론

성 평등주의 접근법으로 21세기 선진국의 출산율 회복과 미회복을 설명하는 분석틀로는 다중균형모델 외에 McDonald[9][10]의 성 평등이론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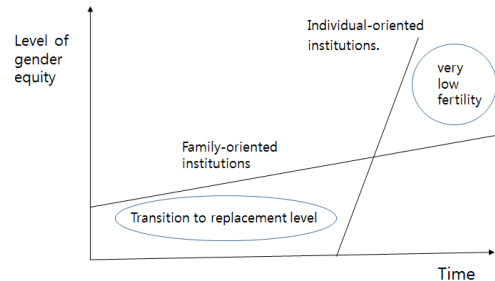


Fig. 2. Changes in the level of gender equity over time in family-oriented and in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10]

McDonald[9][10]의 성 평등이론의 특징은 성 평등을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에서의 성 평등과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s)에서의 성 평등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 평등이란 교육 취업 건강 등 개인의 삶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고, 가족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 평등이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정주부의 성별분업적 가족제도에서 탈피해 부부가 소득 창출, 가사노동, 그리고 자녀양육 세 측면에 대한 자원과 능력의 동등한 분배, 동등한 참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0].

McDonald[10]는 교육 취업과 같은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 높은 수준의 성 평등이 나타나지만, 가족 지향적 제도에서 낮은 수준의 성 평등이 나타나 서로 겹쳐질 때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아이디어를 [Fig. 2]에서 개념화하였다.

3.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

3.1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개요

3.1.1 기본 개념: 가족 관계의 수평축과 수직축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들 부부 사이의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의 기본형이라고 정의하며, 확대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은 기본형의 변형으로 본다.

가족에서 수평축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라고 정의하고, 수평축은 부모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자관계라고 정의한다. 가족은 시대와 장소, 민족을 불문하고 수평축과 수직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존속해 왔다. 수평축은 부부 간의 평등한 결합을 의미하며, 애정과 소통을 통한 친밀함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수직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자식은 부모에서 출생했다는 출산자와 피출산자의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수직축은 원초적으로 불평등하다. 수직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양육과 부양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의 형성과 유지 및 존속에 있어, 가족의 수평축과 수직축, 두 축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수평축이 비혈연관계로서 평등한 관계를, 수직축은 혈연관계로서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평축과 수직축은 서로 긴장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족이 어느 축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자식을 낳았으므로 부부의 금슬이 좋아 서로의 행복을 높일 수 있고, 또 아들을 낳았으므로 가문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수직축을 중시하는 사회와 수평축을 중시하는 사회는 서로 상반된 가족 행동을 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부부 사이가 친밀했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칠거지악의 하나로 내칠 수 있었고, 현대사회에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부에만 좋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족과 관련해 수직축을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수평축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가 된다.

가족의 수평축과 수직축 가운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하나의 축이 중심 역할을 하면, 다른 하나의 축은 보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수직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현대사회는 수평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3.1.2 가족 중심축 변환의 근본원인.

본 연구에서 가족 중심축의 변환과정은 가족의 중심축이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며, 역사적으로 비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가족 중심축의 변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이다. 산업혁명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제조업)로 이행하고, 이후 후기산업사회(서비스업)로 이행해왔다. 동시에 자유와 평등의 근대이념이 국가의 공공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에 내면화되고, 경제발전에 따라 개인의 독립성, 선택의 자유, 자아실현 등 개인주의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14].

사회경제적 발전이 전개될수록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확산 및 심화되고, 이에 부합하는 수평축이 강화되면서 가족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반대로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직축은 약화되어 보조축 역할에 머무는 방식으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진행되었다.

서구 유럽의 경우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200여년에 걸친 장기적인 변화였다면, 한국의 경우 6·25전쟁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21세기까지 60여년 만에 이뤄진 ‘압축적인’ 변화이었다[20].

3.1.3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로 본 사회 변화상

3.1.3.1 가족 수평축의 강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잘 보여준다. 1960년대 초까지 농업사회였다가 불과 50~60년만에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산업사회가 되었고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급격히 전개되었다.

먼저 연애혼이 보편혼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근대 이전까지 중매혼이 보편적인 결혼양식이었다[21]. 한국에서 연애혼이 보편화된 것은 30~4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혼인의 결정방식이 1950년대에는 부모가 전적으로 결정하거나(67.6%) 부모 결정 후 본인이 동의하는(21.2%) 중매혼이 압도적이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본인 결정 후 부모가 승낙하거나(66.6%)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18.2%) 연애혼이 압도적이었다[22] 인구 1천명당 혼인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1990년 9.3에서 2000년 7.0, 2010년 6.5로 낮아졌다가 2014년 6.0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조이혼율은 1990년 1.1, 2014년 2.3

으로 높아졌다[23]. 특히 20년이상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2014년 전체 28.7%로 1990년 5.2%, 2000년 14.2%, 2010년 23.8%에 비해 상승일로에 있다[23]. 결혼과 이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적 성격이 강해졌고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남녀평등에 반하는 각종 법과 제도들이 위헌판결로 사라졌다. 1997년 동성동본금혼제, 2005년 호주제와 부성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2015년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1983년 여성정년차별소송 승소판례나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20].

3.1.3.2 가족 수직축의 약화

반대로 수직축 약화에 따라 전통적인 부계제도의 쇠퇴가 뚜렷하다. 첫째 남아선호사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23]에 따르면, 2014년 출생성비가 105.3으로 정상수준(103~107)을 유지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인 출생성비가 1993년 207.3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낮아져 2014년에는 106.8로 정상 출생성비에 진입했다. 가문을 상속하고 계승해왔던 아들 승계방식이 이제 가족 내에서 사실상 설득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속제도가 '부자상속'에서 '부부상속'으로 바뀌고 있다. 상속은 보통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자식들이 유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 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 이전에는 관습법상 장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 그러나 1960년부터는 장남의 상속분이 1.5, 차남이 1, 처와 미혼녀는 각각 0.5, 출가한 딸은 0.25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았다. 1991년부터 배우자만 상속분이 1.5이고,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관계없이 모두 상속분 1로서 균일하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1/2의 선취분을 상속받은 다음, 남은 재산 1/2을 현행 법률대로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20]. 상속 재산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란 개념에서 ‘부부가 혼인 중 서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란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조상을 기리는 제사가 축소 또는 간소화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20]. 합제(모듬제사)가 등장하고 봉사대수가 줄어들었으며, 제사 장소 및 제사 시간이 바뀌고 있다. 또 묘제에도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적고 참여의식도 희박해지고 있다.

3.2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

가족 중심축이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이동하는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에는 Clark, Kuznets, Bell, Inglehart 등이 사용했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도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에는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평등이 달성되지만,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의 수평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산업화 단계에서 이루지 못한 가족의 유지 측면의 수평화가 달성되어 가족 중심축의 변환이 완료된다. 따라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모형은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중심축이 수직축이었으나,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가족의 중심축이 수평축으로 변환된다고 가정한다.

3.2.1 산업화 단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산업화 단계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로 본다.

근대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유와 평등 이념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내면화된다. 혼인이 집안간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 당사자 간 계약으로 바뀌고, 보편적 결혼형태가 중매혼에서 연애혼으로 바뀐다[21]. 그래서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을 형성하는 의사결정이 수직축 중심에서 수평축 중심으로 바뀐다.

이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는 달리,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9]. 여성의 교육 기회도 남성 못지않게 부여되고, 발달된 국가보건체계에 의해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피임기술과 피임약이 보급되고,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여성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이 대폭 신장된다[20].

그러나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도 사회의 유급노동에 진입하기 시작하지만,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가 적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임금의 하층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다. 남편이 가족의 생계 부양을 책임지고 아내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확립된다[9].

산업화 단계에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져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는 남녀 간에 수평적 평등 즉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여성의 독립성은 자녀의 출산시기와 자녀의 수 등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지만, 전통적인 성별분업체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3.2.2 후기산업화 단계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후기산업화 단계는 주로 선진국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또는 IMF 외환위기 이후로 본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동등해지거나 오히려 남성을 상회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여성 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산업화 단계에서 확립된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흔들리게 되고 돌봄 노동의 공백을 초래한다[9]. 대안으로 여성이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맞벌이 모형(double role model)’이 등장하지만, 돌봄 노동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고 여성에게만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불평등 모형이라고 비판 받는다.

후기산업화단계에서 개인의 자율성,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사회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심화된다.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 활동을 시작한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 등 가족의 유지에 있어 부부 간 수평적 역할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제도에까지 남녀 간 수평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남성들과 기성세대들은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는 기존 수직축 중심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노동시장과 각종 사회제도 또한 남성 위주의 사회체제를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9].

그러나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모형에서는 종국에는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달성될 것으로 가정한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족 내에서의 돌봄 노동의 공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녀 간 임금격차의 심화, 사회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들이다.

3.3 수평화 모형과 출산율의 결정요인

3.3.1 산업사회와 출산율의 결정요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한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 여성도 문화해독능력과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재산권과 참정권을 획득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유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때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구미국가들은 베이비붐 시대를 겪은 뒤, 1960년대와 70년대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출산율의 하락 이론들은 그 원인으로 ① 자녀교육의 향상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 ② 여성 비농업 부문 취업의 증대와 출산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③ 다산(多産) 사상을 떠받친 종교심의 저하, ④ 전통적인 행동규범의 계승을 저해하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⑤ 교육의 의무화와 아동의 경제적 가치의 저하, ⑥ 노령보호,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⑦ 사회적 유동성의 증대, ⑧ 유아사망률의 지속적 저하, ⑨ 값싸고 확실한 피임방법의 보급이라는 다종다양한 요인을 열거해 왔다[24]. 이들은 모든 학자들이 통상 근대화의 지표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며 인구전환이론의 실제적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이 경제와 사회의 근대화와 연계되어 일어난 것은 틀림없지만 당초 기대했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가 출산력 하락과 일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24].

하지만 여성의 교육 증가가 출산율 하락과 밀접하다는 연구는 연구자나 연구영역 연구대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25]. 특히 개발도상국의 출산력 변화의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주어진 사회의 평균 교육수준이다 대체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에 남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히려 수직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출산율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25].

따라서 산업화 단계에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결혼 이혼 등 가족의 형성측면에서 진행되므로, 다양한 근대화 지표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결정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3.3.2 후기산업화단계와 출산율의 결정요인

후기산업화단계의 특징은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동등해지거나 오히려

려 남성을 상회하며,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여성 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고, 여성의 발언권도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 활동을 시작한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 등에 있어 부부 간 수평적 역할을 요구하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제도에까지 남녀 간 새로운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산율 반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양성평등이 진행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Esping-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과 McDonald의 성 평등이론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진행되므로, 양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결정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4.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4.1 연구방법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각각 출산율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말하면 가족 중심축이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들과 후기 산업화단계의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있어,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를 경험한 여러 선진국들의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두 단계에서의 출산율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다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오는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선진국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업화 단계의 개발도상국들과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들을 나눠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산율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첫째 전세계 200여 국가들을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둘째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셋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을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먼저 연구대상인 국가 범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년 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를 발표했던 145개국으로 한정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범위였다.

둘째 전세계 145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을 선진국으로, 나머지 111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산업혁명 이후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에 이행하는 산업구조이행론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산업구조 이행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OECD국가 가운데 카타르, 쿠웨이트, 브루나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8개 산유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만, 산업구조의 이행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그룹은 비OECD 국가 111개국 가운데 산유국 8개국을 제외한 총 103개국으로 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이스라엘의 2014년 합계출산율이 3.05로 OECD 평균(1.67)보다 높아 이상치(outlier)인데다가 출산율의 원인이 특수성 때문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전체 인구의 12-15%에 달하는 초정통과 유대인들이 평균 6-7명의 자녀를 두는 등 종교적 요인과 출산율이 4.2인 팔레스타인과의 인구 경쟁을 벌이는 민족적 요인 때문이다[26].

셋째 본 연구는 먼저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을 선행 연구[25]에서 선택했다. 변수는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비롯,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 출산연령(mean age of childbearing),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여성의 교육수준(expected years of schooling, female),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l), 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이다. 다만 성격차지수는 경제 참여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건강 생존(health and survival), 정치 영향

Table 2. The statistic and sources of variables

	variable(unit)	min	max	av	s. d.	sources	time
Developing Country (103)	total fertility rate	1.25	6.23	2.93	1.39	World Bank	2014년
	sex ratio at birth	1.02	1.16	1.05	0.02	UNDESA	2015년
	mean age of childbearing(years)	25.6	31.5	28.3	1.31	UNDESA	2015년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14	90	58.3	17.3	World Bank	2013년
	GNI per capital(10,000\$)	0.07	7.66	0.98	0.95	UNDP	2014년
	expected years of schooling, female	5.9	19.1	12.4	2.69	UNDP	2014년
	global gender gap index	0.13	0.63	0.41	0.09	WEF	2015년
Developed country (33)	total fertility rate	1.21	2.24	1.63	0.27	World Bank	2014년
	sex ratio at birth	1.03	1.11	1.05	0.02	UNDESA	2015년
	mean age of childbearing(years)	26.9	31.6	30.1	1.12	UNDESA	2015년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32	82	66.1	10.0	World Bank	2013년
	GNI per capital(10,000\$)	1.61	6.50	3.63	1.18	UNDP	2014년
	expected years of schooling, female	13.2	20.7	16.9	1.69	UNDP	2014년
	global gender gap index(0~1)	0.28	0.78	0.50	0.12	WEF	2015년

Table 3. Hierarchical analysis of 103 developing countries

variable		model 1		model 2	
		regression coefficient(B)	st. regression coefficient(β)	regression coefficient(B)	st. regression coefficient(β)
control variable	constant	-10.7869		- 1.0149	
	sex ratio at birth	+ 0.1629	+ 0.0028	- 1.7180	- 0.0296
	mean age of childbearing(years)	+ 0.4296	+ 0.4035***	+ 0.3125	+ 0.2935***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0.0238	+ 0.2962***	+ 0.0147	+ 0.1824**
explanatory variable	GNI per capital(10,000\$)			- 0.3533	- 0.2419***
	expected years of schooling, female			- 0.2911	- 0.5618***
	global gender gap index(0~1)			- 0.0029	+ 0.0002
$R_{adj}^2 (\Delta R_{adj}^2)$		0.1923		0.7178	
F		9.10***		44.24***	

* p<0.1, ** p<0.05, *** p<0.01

Table 4. Hierarchical analysis of 33 developed countries

variable		model 1		model 2	
		regression coefficient(B)	st. regression coefficient(β)	regression coefficient(B)	st. regression coefficient(β)
control variable	constant	+ 8.0553		+ 8.2813	
	sex ratio at birth	- 3.1870	- 0.1756	- 2.7731	- 0.1528
	mean age of childbearing(years)	- 0.1195	- 0.4888**	- 0.1561	- 0.638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0.0078	+ 0.2842	- 0.0154	- 0.5655**
explanatory variable	GNI per capital(10,000\$)			+ 0.0768	+ 0.3311*
	expected years of schooling, female			+ 0.0499	+ 0.3075*
	global gender gap index (0~1)			+ 1.6947	+ 0.7156***
$R_{adj}^2 (\Delta R_{adj}^2)$		0.1135		0.5216	
F		2.37*		6.81***	

* p<0.1, ** p<0.05, *** p<0.01

력(political empowerment) 등 4가지 하위 지수 가운데, ‘경제 참여 기회’지수와 ‘정치 영향력’지수의 산술평균을 사용했다. 성격차지수는 4가지 하위 지수를 고려, 산업화단계에서의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후기산업화단계에서의 가족 내 부부 평등 및 노동시장 등에서의 남녀평등을 포괄한다. 그래서 산업화단계의 남녀평등 개념에 가까운 ‘교육 성취’지수와 ‘건강 생존’지수를 제외하고, ‘경제 참여 기회’지수와 ‘정치 영향력’지수의 산술평균을 성격차지수로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별 기술통계량과 출처는 [Table. 2]와 같다.

이들 변수들 가운데, 산업화 단계의 개발도상국 그룹과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 그룹 각각에 대해 출생성비,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4.2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4.2.1 개발도상국 그룹(산업화단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개발도상국 103개국의 경우, 일반적 특성(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단계 위계에는 통제변수들을, 2단계 위계에는 설명변수들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 간 평균 VIF가 1.63이었다.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만 포함된 1단계 위계에서 평균출산연령($p < 0.01$)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p < 0.01$)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는 출산율의 설명력이 19.23%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이 포함된 두 번째 위계를 투입한 모형2에서 설명력은 71.78%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p < 0.01$)과 여성의 교육수준($p < 0.01$)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성격차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0.3533로 하락했으며($B = -0.3533$), 여성의 교육수준이 1년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0.2911만큼 하락했다($B = -0.2911$).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beta = -0.5618$), 1인당 국민소득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beta = -0.2519$).

4.2.2 선진국 그룹(후기산업화단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선진국 33개국의 경우도, 일반적 특성(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성격차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단계 위계에는 통제변수들을, 2단계 위계에는 설명변수들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 간 평균 VIF가 2.20에 불과했다.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만 포함된 1단계 위계에서 평균출산연령($p < 0.05$)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는 출산율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11.35%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이 포함된 두 번째 위계를 투입한 모형2에서 설명력은 52.16%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p < 0.1$)과 여성의 교육수준($p < 0.1$), 그리고 성격차지수($p < 0.01$) 모두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격차지수($\beta = +0.7156$)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beta = +0.3311$)과 여성의 교육수준($\beta = +0.3075$)이 성격차지수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성불평등(0)과 완전 성평등(1) 사이에 성격차지수가 0.1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0.1694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6947$).

4.2.3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의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비교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을 대상으로 출산율에 대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5]와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소득이 1만 달러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0.35333 하락했으나($p < 0.01$), 선진국 그룹에서는 0.0768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p < 0.1$). 재미있는 것은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 즉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단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산업화단계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상

Table 5. The regression coefficient(B)and st. regression coefficient(β)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103)		Developed Countries(33)	
		regression coefficient(B)	st. regression coefficient(β)	regression coefficient(B)	st. regression coefficient(β)
control variable	mean age of childbearing(years)	+ 0.3125	+ 0.2935***	- 0.1561	- 0.638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0.0147	+ 0.1824**	- 0.0154	- 0.5655**
explanatory variable	GNI per capital(10,000\$)	- 0.3533	- 0.2419***	+ 0.0768	+ 0.3311*
	expected years of schooling, female	- 0.2911	- 0.5618***	+ 0.0499	+ 0.3075*
	global gender gap index(0-1)	- 0.0029	+ 0.0002	+ 1.6947	+ 0.7156***

* p<0.1, ** p<0.05, *** p<0.01

증한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의 경우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2911 하락했으나(p<0.01), 선진국 그룹에서 0.0499 상승했다(p<0.1). 여성의 교육수준도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에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작용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업화단계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오히려 올랐다.

셋째 통제변수인 평균 출산연령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에 상반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의 교육수준과 동일했다.

넷째 성격차지수의 경우, 개도국 그룹에서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선진국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p<0.01). 개도국 그룹에서는 성평등이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 후기산업화단계에 들어서면 출산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에서 표준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격차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룹 간에 출산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1인당 국민소득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과 여

성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격차지수가 출산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 그룹과 후기산업화단계의 선진국그룹 사이에 출산율 결정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차우(Chow) 검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 연한, 성격차지수 세 변수를 가지고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에서의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이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는 Chow 검정을 실시하면, F(4,128)=5.4386으로 P-값이 0.00044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회귀계수의 질이 전혀 달라, 두 단계에서 출산율을 결정요인들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Chow 검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나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농업사회에서 제조업중심의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의 결정요인이며, 다시 발전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의 결정요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5. 연구결과의 함의와 논의

5.1 연구결과와 함의

본 연구에서 산업화 단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의 경우 성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며,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각

각 서로 다른 요인이 출산율을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로축에 합계출산율을, 가로축에 여성의 교육수준과 성평등수준을 넣고 그래프를 그리면 [Fig. 2]과 같은 새로운 U자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를 2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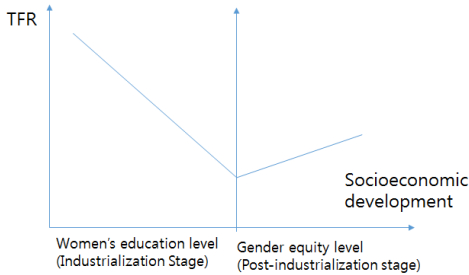


Fig. 2. The fertility rate' determinants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and postindustrialization stage.

첫째,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과의 관계이다. 가로축의 의미는 한 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발전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추이는 어느 나라가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했다가 후기산업화 단계에 이르면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의 관계는 U자형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성평등주의와 출산율과의 관계이다. 가로축의 의미를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달단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성 평등주의 확산으로 바꿀 수 있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정도를 의미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교육 건강 취업 등 남녀 개인 간의 성 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에 후기 산업화단계에서 성 평등 수준은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정도를 의미하고, 가족 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성 평등 수준, 가족 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산업화단계에서는 남녀 간 개인별 성 평등주의 확산을,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가족 내 부부간 성 평등주의 확산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주의 확산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 평등주의와 출산율 간에도 U자형 관계가 성립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5.2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서구 유럽 등에서 논의중인 Esping - Andersen의 다중균형모형 및 McDonald의 성평등이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출산율과 성 평등주의가 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Esping -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중균형모형이 성별분업에서 성평등주의로 이행한다고 봤다면, 본 연구는 가족의 중심축이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변환된다고 보았고 수직축 사회가 성별분업을, 수평축 사회가 성평등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중균형모형과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은 유사하다.

그러나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가족의 형성과 유지라는 두 단계에 걸쳐 전개된다는 점에서 다중균형모형보다 설명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다중균형모형은 초기 성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임계점을 지나 성평등주의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출산율이 다시 상승한다고 했다. 대신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산업화 단계에서 남녀간 평등이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부부간 평등이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중균형모형에서 사용된 ‘성평등주의’ 의미를, 산업화단계에서 ‘남녀간 평등’과 후기산업화단계에서의 ‘부부간 평등’으로 나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두 모형에서 나타나는 U자형 이행과정에서, 다중균형모형은 출산율이 매우 낮은 ‘이행의 계곡’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들의 출산 결정이나 사회제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호하다.

하지만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보면, 이행의 계곡에서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는 수평축이 중심역할을 하지만,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는 수직축이 여전히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녀 간 임금격차의 심화,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사회현상들은 이행의 계곡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연구결과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는데 반해 성평등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에 빠진 이행의 계곡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 McDonald는 성 평등이론에서 저출산의 늪에 빠진

국가들의 경우 교육과 시장노동과 같이 개인 지향적 제도의 성 평등 수준이 높지만, 가족 지향적 제도의 성 평등 수준이 낮아 저출산이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McDonald가 주장하는 개인 지향적 제도의 높은 성 평등 수준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의 형성 측면의 수평화와 같은 맥락이다. 가족의 형성 측면의 수평화는 가족 내에서 결혼과 이혼의 평등성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투표권 재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측면에서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McDonald가 주장하는 가족 지향적 제도의 낮은 성 평등 수준은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의 유지 측면의 수평화가 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McDonald의 성 평등이론은 저출산에 눈에 빠진 선진국들에 대한 뛰어난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다중균형모형처럼 어떤 이행과정이나 특정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 없고,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검증하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가족의 수평축 2단계 모형은 Esping-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McDonald의 성 평등이론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있으면서도 두 이론이 지닌 장점과 특징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5.3 한계

본 연구는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라는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에서 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바로 시계열분석이 아닌 횡단면 분석의 적절성 문제이다.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선진국 시계열데이터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하지 않고, 전 세계 136개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다음 횡단면 분석을 실시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농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 제대로 이행해왔는지, 각 변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불분명하다. 앞으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별 국가 간 심층 비교분석이나 이론적 접근을 통한 한국 경험에 대한 해석 등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 [1] Goldstein, J. R., Sobotka, T., Jasilioniene, A.,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 pp. 663-699, 2009.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9.00304.x>
- [2] Bongaarts, J. and Sobotka, T., “A demographic explanation for the recent rise in European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 pp. 83-120, 2012.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2.00473.x>
- [3] Esping-Andersen, G., Billari, F. C.,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pp. 1-31, 2015.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24.x>
- [4] Rindfuss, Ronald R., Karin L. Brewster., “Childb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pp.258 - 289. 1996.
DOI: <https://doi.org/10.2307/2808014>
- [5] Ahn, N., Mira, P.,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pp. 667-682. 2002.
DOI: <https://doi.org/10.1007/s001480100078>
- [6] Billari F. C. and H.-P. Kohler, “Patterns of the lowest -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pp. 161-176, 2004.
DOI: <https://doi.org/10.1080/0032472042000213695>
- [7] Chesnais, J.-C.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 (EU-15): Facts and Policies, 1960 - 1997”, *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7, pp. 83-101, 1998.
- [8] Castles, F.G.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pp. 209-227, 2003.
DOI: <https://doi.org/10.1177/09589287030133001>
- [9] McDonald, P.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The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pp. 1-16. 2000.
DOI: <https://doi.org/10.1007/BF03029445>
- [10] McDonald, P.,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 427-439, 2000.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0.00427.x>
- [11] C. Y. Jeon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obmumsa, 2006.
- [12] J. S. Han, W. H. Lee, J. K. H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heongram, 2014.
- [13] D. Bell, *The Coming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1976.
- [14] Inglehart, R., and Welzel, C.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2005.
- [15] Inglehart, R., Norris, P. *Rising Tide: Gender Equality and Cultural Change aroun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550362>
- [16] Esping-Andersen, G. *The Incomplete Revolution* 2009.

- [17] Myrskylä, M., H-P. Kohler., Billari. F.C.,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7256), pp. 741-743. 2009.
DOI: <https://doi.org/10.1038/nature08230>
- [18] Myrskylä, M., H-P. Kohler., Billari. F.C. “High Development and Fertility: Fertility at Older Reproductive Ages and Gender Equality Explain the Positive Link.” Max Plan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2011.
- [19] Torr, B. M., and Short, S. E.,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pp. 109-130. 2004.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4.00005.x>
- [20] J. S. Lee, and Y. M. Song. The Failure of the Family. Hyungseul. 2015.
- [21] Coontz, S. Marriage, A History. 2006.
- [22] K. S. Chang. Family, Life, and Polical Economy, 2009.
- [23] Kostat(www.kostat.go.kr)
- [24] O. A. Kim. Demographic Economics. Yullim- munhwas. 2000.
- [25] Hotz, V. J., Klerman, J. A., and Wilis, R. J.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 1. 1997.
- [2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 [27] Goldman, D.P. (2013). Israel’s Demographic Miracle, <http://www.jewishpolicycenter.org>, 013.
- [28] KNOEMA(www.knoema.com)
- [29] UNESCO(www.unis.unesco.org)
- [30] UNDP(www.undp.org)

이 제 상(Je-Sang Lee)

[종신회원]



- 2009년 2월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2015년 8월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저출산, 인구, 경제성장

송 유 미(Yoo-Mee Song)

[종신회원]



- 1998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6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양성평등, 가족 정책